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2006. 1

통일정세분석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2006. 1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영윤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머리말	1
II.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내 활동 개요	2
1. 중국 중·남부 개방특구 방문	3
2. 북·중 정상회담 및 기타 활동	4
III.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과 결과	5
1. 북·중간 정치적 유대 강화	5
2.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	7
3. 위폐·인권·6자회담 등의 입장 조율	10
IV. 향후 동북아 정세 전망	14
1. 북한의 개방 정책	14
2. 6자회담	16
3. 북·중 관계	17
4. 북·미 관계	18
5. 북·일 관계	19
6. 남북관계	20
V. 우리의 정책 방향	22
<표 IV-1> 김정일 방중 이후 북한의 변화	15
<표 IV-2> 2005. 1~11월 중 북한의 對中 교역실적	17

I. 머리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간 중국을 비공식방문, 북·중간 친선협력을 공고히 하였음.
 - 김 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개방지역인 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선전(深圳) 등을 방문, 향후 북한의 ‘초기 중국식 개혁·개방’ 채택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0월 28일 양국 정상이 확인한 북·중간 친선관계 강화를 재천명하고, 현안인 6자회담 및 위폐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북·중간 정치적 행보는 위폐 및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제2단계 5차 6자회담 개최가 지연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북한 및 중국이 어떤 정책을 제시할 지가 국내외적 관심사로 등장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6자회담을 비롯한 현안 및 전개방향을 전망해 보고자함.

II.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내 활동 개요

- 북한은 지난 1월 18~19일 양일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대표적인 언론매체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하였음.
 - 김 위원장이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내각 총리 박봉주, 외무성 제 1부상 강석주, 당 부장 박남기·이광호, 내각 부총리 노두철을 대동,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 베이징에서 김정일·후진타오간 상봉과 회담을 통해 조·중간 선린우호관계 확인 및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으며(1.18, 중·평방, 조선중앙TV),
 - 중국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이창(宜昌),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선전(深圳) 등을 오가며, 중국 경제·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요해했다고 보도(1.19, 중·평방)

- * 북·중 양국의 관영매체의 보도는 약간 차이를 보였는 바,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문사실, 수행원, 중국의 환영, 회담 내용 등으로 시작한 반면, 중국은 머리부분에 김 위원장의 방문지를 강조하였음. 또 북한은 베이징을 제외하고 김 위원장의 방문 지역을 끝내 감췄으나 중국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이창(宜昌),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주하이(珠海)·선전(深圳), 베이징 등의 방문지역을 순서대로 공개

1. 중국 중·남부 개방특구 방문

- 김정일 위원장은 후베이(湖北)성 우한시를 방문,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창페이(長飛)유한공사와 봉화통신주식유한공사를 참관한데 이어 창장(長江) 삼협수력발전소를 참관하였음.
 - 김 위원장은 후베이성 시찰에서 황궈(黃菊) 부총리와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대외연락부장, 위정성(俞正聲) 후베이성 당서기의 안내를 받았고, 삼협수력발전소를 시찰한 뒤 “중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창조물”이라며 “이것은 중국 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시”라고 언급

-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방문 때는 위창일신전자공사, 연중불수강공사, 광주국제회의전람센터, 지하철도를 참관하는 등 광저우시 건설 정형을 살펴 본 다음 중산대학·성해음악학원·동성농장유한공사를 시찰하였음.
 - 주하이(珠海)시에서는 중국공상은행소프트웨어개발센터, 그리공기조화기생산공사, 동신화평스마트카드주식유한공사를 참관
 - 선전(深圳)시에서는 옌텐(鹽田)항, 화웨이(華爲)기술유한공사, 다쭈(大族)레이저과학기술주식유한공사 등을 시찰
 - 광둥성 방문 기간에는 장더장(張德江) 광둥성 당서기와 함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으며 장 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

2. 북·중 정상회담 및 기타 활동

- 1.17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친선협조관계 지속을 강조하는 한편, 6자회담의 실효성 및 지속 협력을 합의하고, 북한은 중국식 경제발전을 칭찬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인정함.
 -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지속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난관 극복과 회담의 진전 방도를 찾기 위해 중국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
 - 중국은 “조선이 자기나라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개발 모델 지지 입장을 표명
 - 정상회담에는 부주석 쩡칭훙, 국무위원 탕자쉬안,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등 배석

-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총서기의 안내로 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참관외에도 후진타오 총서기 주최 연회에 참석하고, 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원자바오 국무원 총리·자칭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등과 면담하였으며,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 주최 오찬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방중일정을 소화해냈음.

Ⅲ.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목적과 결과

1. 북·중간 정치적 유대 강화

가. 현안 및 방중 목적

-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의 ‘항미원조(抗美援朝)’ 논리에 입각한 참전에 의해 형성된 북·중간 ‘혈맹관계’는 1992년 중국의 대한 수교, 1993년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인해,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기 중국 홍위병들의 김일성 비난으로 야기된 갈등 상황 이후 가장 열악한 상황이었음.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을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배신자”라고 비난
- 소원해진 북·중관계는 1995년부터 약간씩 회복되었으나 2000년 3월 5일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적인 駐北 중국대사관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 방중 및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결정적인 회복기를 맞이하였음.
 - 동년 김 위원장의 방중(5.29~31)에 의한 북·중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 확립, 경제지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등 조율
- 그러나 중국은 2003년 9월 자신과 사전 상의없이 진행된 북한의 신의주 특구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중국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신의주 행정장관직을 맡은 양빈을 구속함으로써 북·중간 정치관계는 다시 악화됨.

- 북·중관계가 소원한 상태에서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장기간 휴면상태에 들어갔고, 이의 해소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를 수행한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은 2004년 4월 중국 방문 후 제3차 6자회담 복귀를 선언, 중국의 조정자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음.
- 이처럼 전통적인 북·중관계 복원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지난 해 9월부터 위폐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발생하였는 바,
 - 북·중 정치동맹을 통해 대응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안정 및 대북 영향력 유지를 획득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일치,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나. 결과

- 북한 및 중국의 세대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혈맹관계’의 복원은 아니지만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사회주의권 붕괴 직후보다는 진전된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됨.
 - 1.1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선린우호협조관계를 강조
 - 후진타오 주석은 “두당 두나라 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고, 중조선린우호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임을 확인
 - 특히 “조중친선은 두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맺어주시고 키워 주셨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더욱 빛나게 발전”할 것임을 강조
- 북한은 중국의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에 대해 적극 지지하였고, 중국은 북한사회주의 및 통일 방안

을 지지함으로써 양국의 발전 노선 및 체제에 대한 외부 간섭 배제를 분명히 하였음.

- 미국의 대북 압력이 북·중간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

○ 한편 중국의 후 주석이 김 위원장의 중국 남방 방문을 권유한 이유는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식 개혁·개방’ 현장을 김 위원장에게 보여줌으로써 북한도 안심하고 개혁·개방에 임하라는 암시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개혁·개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조 침투로 인한 내부폭발 가능성 및 미국의 체제붕괴 공작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2. 북·중간 경제협력 확대

가. 현안 및 방중 목적

○ 북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 왔음.

- 1970년대 초 서방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 1983년 합영법 발표,
- 1991년 나진선봉특구 설치 발표,
-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시행,
- 2000년 8월 개성공단 조성 합의,
- 2002년 9월 신의주특구 설치 등

○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해외 투자 유치 부진으로 대부분 실패한 실정이

고, 남한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 특구만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임.

- 특히 신의주 특구는 양빈(楊斌) 행정장관 구속 등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실패한 사례로서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함.
- 198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은 북한의 ‘중국식 개방’ 정책 원용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짧은 중심’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음.
 - 다만, 금강산 관광 개방 등 개방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개방
-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28일 후진타오 방북시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도입을 전제로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지원을 시사하였고, 금번 김 위원장의 중국 개방특구 중심의 방중도 개방 확대를 위한 현장교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해 북·중 정상회담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과 북한 기업의 투자협력을 고무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 경제협력을 원조와 교역 중심에서 투자로 확대할 것을 시사
 - 양국은 지난해 3월 ‘투자촉진 및 보장협정’에 이어, 10월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
 -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북한에 약 20억달러의 장기 원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 한편 중국 경제특구에 대한 집중 방문은 북한의 경제전문가들에 대한 중국개방특구 학습 및 군부실세들의 세계정세 습득과 의식전환도 병행

나. 결과

- 금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0월 28일 합의된 중조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고히 되었고, 북한이 중국과 유사한 개혁·개방을 채택 할 경우 중국이 대북 투자를 적극화하는 것이 약속된 것으로 보임.
 - 김정일 위원장은 남부지방 방문 후 “약동하는 중국의 현실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강조, 향후 중국식 경제정책 채택 가능성을 시사
 - 2005.10.28 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원조가 아닌 투자방식으로 대북 지원

- 김정일 위원장은 남쪽의 개방지역 방문외에도 중국 농업과학원 작물 과학연구소를 방문, 식량난 해결에 필요한 기술도입에도 관심을 표명 하였기 때문에 향후 북·중간 농업기술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후 주석은 “조선인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축원”한다고 강조, 농업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시사

- 한편, 김정일 위원장 수행원은 주로 박주봉·강석주 등 당·정 인물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김일철 인민무력 부장, 박재경 군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백세봉 국방위원회 위원 등 군 관련 인사들도 김 위원장 방중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바, 북·중 간 군사분야 협력 강화도 논의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군부인사들은 이미 김정일의 2000년 방중시부터 수행했기 때문에 금번도 예외는 아닐 것인 바,
 -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구실하에 북·중간 군사협력 확대를 요청했을 가능성

- * 1.12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고(故) 김일성 주석의 삼촌으로 항일운동을 편 것으로 알려진 김형권(金亨權) 사망 70주기 중앙 추모회시 김 위원장 공식수행원외에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실세들 불참

3. 위폐·인권·6자회담 등의 입장 조율

가. 현안 및 방중목적

-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미국시간)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슈퍼노트)를 유통해 온 것으로 발표하고 각종 경제제재 조치를 강구하였음.
 - 미국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 자국 금융기관들의 BDA와의 직간접 거래 중지 요청
 - 타국 해당 은행에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유의토록 통보
- 이에 따라 BDA측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하였는 바, 북한은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단계 5차 6자회담 시 미국의 금융제재를 강력히 비난하고, “핵문제논의 유보”를 천명한 채 제2단계 5차 6자회담에도 불참하고 있음.
 - 북한은 주거래 은행을 오스트리아 및 중국 주하이 등지로 전환
- 북한의 강경한 입장 배경에는 위폐문제로 인한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 전체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물론, 김정일 개인의 체제유지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정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서방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던 사안으로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나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NGO에서는 이미 문제시하였으나 미국이 이를 정부차원에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부터임.
 -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 특사는 지난 해 9월 8일(미국시간) 북한 인권 개선문제와 대북 식량원조문제의 연계를 시사함으로써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암시

- 한편, 6자회담은 지난 해 9월 ‘9·19 공동성명’을 발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마련했으나 대북 경수로 지원 시점문제와 관련 미국과 북한의 견해가 상반되게 나타남으로써 6자회담의 전도에 암영이 드리워지기 시작함.
 - 경수로 지원문제가 북·미간 현안이 된 이유는 북핵폐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없이 ‘경수로’라는 세글자가 포함된 것에 대한 미국 ‘네오콘들’의 반발인 것으로 판단

- 북한은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시점을 전후로 위폐문제·인권문제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진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바, 김정일 정권 붕괴 내지는 체제전복(regime change), 나아가 대북 무력공격 의도로 인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는 김정일결사옹위 및 총폭탄 정신 강조,
 - 대남차원에서는 민족공조 및 ‘반보수대연합’ 결성 주장,
 - 대외적으로는 북·중 및 북·러관계 강화 등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월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대북 억지력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침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는데,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인권 및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고 그 위험한 전주곡”이라고 대미 비난

- 결국 위와 같은 현안들은 향후 북한의 체제안전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3가지 사안 모두와 직접 연관이 있는 중국과의 정책공조가 필요했을 것임.
 - 위폐문제는 조사결과에 대한 중국의 발표가 중요하고, 인권문제는 중국도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6자회담은 중국이 중재자 역할 수행

나. 결과

- 북·중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6자회담의 지속을 천명하였음.
-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천명하는 한편, 위폐문제 등 6자회담 과정에서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지속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중국도 6자회담틀을 지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가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6자회담 자체는 향후에도 지

속될 것으로 보임.

- ‘6자회담의 난관’인 위폐문제가 양국간에 어떻게 논의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김 위원장이 이 해결방안을 중국과 함께 논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조율된’ 협상안이 미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율된’ 협상안은 ‘도마뱀꼬리자르기식’으로 하위일군들의 ‘관료주의’적 태도나 ‘과잉충성분자들’의 소행으로 돌리는 한편,
 - 재발방지 약속 정도일 것으로 추측

- 북한 인권문제는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지를 표명한 북한 사회주의체제 안정 차원에서라도 북·중간 공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됨.
 - 미국은 1989년 중국 천안문사태 이후부터 UN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난 2003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중국 인권 퇴보를 주장하여 미·중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IV. 향후 동북아 정세 전망

1. 북한의 개방 정책

-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5월부터 3회에 걸친 방중 이후 노선변경없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해 왔음.
 -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개혁정책은 <표 IV-1> 참조

-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도입 시기와 유사하게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틀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식 경제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일정한 속도와 단계로 적용하는 모습을 띌 것으로 추론
 - 이론적 틀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아우르면서도 시장사회주의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표 IV-1> 김정일 방중 이후 북한의 변화

일시	2000년 5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01년 1월	04년 4월	06년 1월
주요 활동	-베이징 IT단지 중관춘 시찰 -김정일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	-상하이 푸둥지구 첨단 산업단지, 금융·상업시설 시찰 -김정일 ‘천지개벽’ 발언	-텐진 하이테크 시설 방문 -박봉주 총리 등 시범농촌 마을 한층허 시찰	-주하이, 선전 등 광둥성 개발특구 시찰
	↓	↓	↓	↓
북한의 변화	-IT산업을 ‘단변도약’의 중심고리로 강조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개발 합의 (2000.8)	-‘신사고’ 제시, ‘3실’(실리·실력·실적) 강조(01.1) -7.1경제개선조치 (02.7) -신의주 특구 지정 (02.9) -개성공업지구 법 제정(02.11)	-3차 6자회담 복귀 발표 (04.6) -‘대경추’를 내각 직속기관화 (04.5) -중국, 대안친선유리공장 지원	-‘시장사회주의’ 이론 도입(?) -추가 개방 특구 지정(?)

* 『조선일보』, 2006.1.17일자 참조

- 북한은 개혁·개방의 실질적 추동력인 자본 유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개혁보다는 특구지정 등 경제개방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고 경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운영 방식과 관련한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됨.
 -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기업운영방식을 도입하거나, 기업운영권을 상당부분 외국 파트너에게 할애
 - 경제특구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 북한의 서해북단 및 압록강·두만강 지역이 될 가능성

* 북한 공영방송 매체들은 연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는 한편, 김 위원장의 중국 개방특구에 대한 칭찬을 강조하고, 특히 중국 남부지방의 IT시설 방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개방의 효과를 선전하여 개방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인 것으로 분석

2. 6자회담

- 북한 위폐문제에 따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물론 PSI까지 강화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단계 5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재로서는 중국의 2월 초순경 6자회담 재개 제의가 위폐문제를 둘러싼 미·중·북한간 입장차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위폐문제는 미국 재무부 소관사항으로서 국무부나 백악관도 예산배분권을 가진 재무부의 의견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마뱀꼬리자르기식’ 해법만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낮음.
 - 미국은 김정일의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철저한 검증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
 - 아울러 마카오는 현재 ‘카지노섬’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미 라스베가스 카지노재벌인 샌즈그룹과 MGM 등 미국 거대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는 중인 바, 미국은 마카오내 미국 기업을 통한 북한의 위폐 유통을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북·중정상회담시 위폐문제 및 6

자회담 재개 문제가 깊이 논의되었을 것이고, 북경에서의 크리스토퍼 힐·김계관 회동(1.18)을 통해 양국의 입장이 충분히 개선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금명간 중국·미국·북한의 현실적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 6자회담은 2월내에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6자회담과 관련 중국의 주선으로 지난 1월 18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과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북경에서 회동, 제2단계 5차 6자회담의 걸림돌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고,
- 중국이 자국의 정치일정을 이유로 2월 초순 개최일정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월중에는 제2단계 5차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3. 북·중 관계

- 향후 북·중간에는 다방면적으로 교류협력이 증대될 것이고 특히 경협은 현재보다 훨씬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단기·중기적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최근 북·중간 교역량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표 IV-2> 참조)

<표 IV-2> 2005. 1~11월 중 북한의 對中 교역실적

(단위: 백만달러)

'04. 1~11월			'05. 1~11월			증가율(%)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1,176	532	644	1,458	462	996	24.0	△13.0	54.6

*한국무역협회(KITA) 북·중교역 통계자료

-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2020년을 ‘전면적 소강사회(全面的 小康社會)’ 달성의 해로 설정하고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예상되는 중국변방의 혼란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군사적 조치는 물론 경제제재 확대까지도 반대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도 중국은 반대

4. 북·미 관계

-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지난 해 ‘9·19 공동성명’ 정국과는 판이한 북미관계가 전개되고 있음.
 - 2004.10.4 미국인권법 미하원 통과, 10.19 부시 대통령 서명
 - 2005.8.19 북한인권대사에 제이 래프코워츠 임명
 - 2004.10.19 일본 정부 송금규제 강화 및 경제제재 구체적 실시계획 공표, 10.26-27 미·일 합동해상훈련 실시(조선중앙통신 10/25일자 논평, 궁극적인 전쟁행위 엄중경고, 10/28일자 논평, 무모한 북침에 비전쟁)
 - 2005.9.15 미 재무부 BDA 북한 자금세탁, 부정금융거래관여 사실 발표
 - 2006.1.10 한국의 PSI 부분참여 및 참관 확정
- 미국의 대북 압력은 북·중관계 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형국은 6자회담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 개방이 속도를 더할 경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비롯한 각종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북·미관계가 상당정도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으로서도 리크게이트, 로비사건 등 다양한 국내문제와 이란 핵·이라크 재건 문제 등의 외교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의 장기간 답보상태는 원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5. 북·일 관계

- 북·일간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북·일 수교회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중 정상회담은 북·일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북·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실무급 회담을 1년여만에 재개한 바 있으나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 한반도 식민통치에 대한 북측의 보상 요구 등으로 별무 성과
 - 그러나 양측은 지난해 12월 국교정상화와 북핵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3가지 현안문제를 각각 3개의 별개 회담을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합의
 -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밀착되는 것은 일본의 대중 경계심을 유발, 북·일 수교회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북경에서 양자 대화가 시작될 예정
- 미국의 대북 달러 투명성 강화 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수교자금 확보 및 일본기업 대북진출은 물론 ‘조총

련'을 합법화시키고, 조총련 기업의 원활한 대북 진출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대일 접근 이유는 경제난 타결에 필요한 100억 달러 상당의 수교자금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이 증대되더라도 북·일 수교 회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6. 남북관계

-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대전제로 변방안정을 위한 북한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통일 등일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중국은 북한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을 철저히 경계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의 대외개방은 한국·미국·일본 등 자본주의국가 기업의 협력없이 는 그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임.
 - 특히 개성공단의 경험을 살려 남한기업의 대북 진출을 확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는 보다 선순환적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도 활발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일반교역과 임가공의 확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협력사업 확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내용면에서도 상생의 기조로 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운영 면에서의 변화를 포함, 방북과 통신 등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변화된 기업운영이 효과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환경(예: 인프라 건설, 물류수송 등) 개선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을 요구할 가능성

○ 다만 북핵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한 북·미간 대립이 격화될 경우, 남북경협에 대한 남한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아울러 PSI 훈련참관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맞이할 가능성

V. 우리의 정책 방향

- 향후 북한은 중국 초기수준의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차관 제공 등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정책에 걸맞는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방을 환영·지원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북·중간 정치·경제·군사 관계 강화는 자칫 북한의 대남한 및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정부는 북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가시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개성공단 2단계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
- 남북경협을 보다 적극적 추진하는 한편, 북한을 주도하는 자세가 요구됨.
 -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 및 제3국 합동방문을 통한 생산 등 기업경영 지식부여 및 인식전환 시도 등
- 북한 경제 회생에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 협력사업을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농업분야, 사회간접시설(전력생산 및 항만시설 개보수, 철도도로연결 등) 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정부는 협력사업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대북 협상을 적극적으로

별어나가야 할 것임.

- 원활한 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해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 사용, 기타 경협 장애요인 등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 필요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 이유인 위폐문제가 양국간 큰 입장차이로 인해 단기간내에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는 제2단계 5차 6자회담 재개를 위해 '9·19 공동성명' 채택 시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임.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및 PSI 훈련 참관 요구에 대한 종합적·전략적·실사구시적 전략 수립 필요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광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 으 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 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 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정세분석 2006-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 2285-0936~7
인쇄일	2006년 1월 일
발행일	2006년 1월 일
